

주제	미디어 관련 토론 자료
요약	<p>주제 1.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. 주제 2.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.</p> <p>위의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된 토론 관련 자료입니다. 각 토론의 주제와 찬성 및 반대 논거, 관련 자료를 첨부했습니다. 첫 번째 주제는 OTT 산업과 같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과 이에 대한 규제를 다룰 수 있는 주제이며, 두 번째 주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, 미디어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.</p>

[주제 1] 토론 관련 자료

토론 주제 -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.

찬성 논거

주장: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.

1. 심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.

- 국내외 OTT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마약, 폭력, 음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물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.
- OTT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유해 콘텐츠의 심의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며, 이를 통해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.

2.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OTT 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,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.

- OTT 시장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, 기존 방송법 등 OTT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들을 통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.
- 이러한 상황에서 OTT와 같은 미디어 플랫폼에 적합한 규제를 도입하고, 이를 강화하여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.

반대 논거

주장: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는 안 된다.

1. OTT 서비스에 대해 국내에서 규제를 강화할 경우,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.

- 현재 대한민국에는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 등의 해외 OTT 플랫폼과 티빙, 웨이브 등 국내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공존하고 있다.
-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한다면, 외국 플랫폼에 비해 한국의 OTT 플랫폼의 경제적 타격이 크고, 이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.
- OTT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경쟁력을 잃는 것은 국내 산업의 측면에서 손해가 크다.

2. 미디어 콘텐츠는 독립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예술 작품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.

- OTT 서비스 규제를 통해 작품의 제작이나 유통에 관여한다면, 창작성을 보장해야 하는 예술 작품에 해를 가할 수 있다.
- 이를 통해 작품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고, 대중 문화 산업의 축소 역시 유발할 수 있다.
- 물론,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,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이외의 작품과 산업 또한 위축될 수 있다.

[주제 1] 주제 관련 자료

1. OTT 규제 찬반 정면충돌..."이용자보호 vs 산업활성화"

출처: <https://www.etnews.com/20190702000338>

2. 수위는 점점 세지는데...OTT 셀프 규제로 해결?

출처: <https://www.hankooki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69619>

3. 빠르게 성장하는 OTT 서비스... "규제냐 활성화냐" 찬반 갈려

출처: https://m.dt.co.kr/contents.html?article_no=2016122702109931042001

[주제 2] 토론 관련 자료

토론 주제 -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.

찬성 논거

주장: 가짜뉴스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.

1. 가짜뉴스는 사익 추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.

-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극적인 정보를 전달하여 조회수 등을 높이려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.
- 혹은,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가짜뉴스를 유포하도록 매수되는 경우도 있다.
- 두 경우 모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

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.

2. 가짜뉴스를 통해 언론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, 사회의 혼란을 가져온다.

- 가짜뉴스의 유포가 확산됨에 따라 사람들은 언론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.
- 이처럼 언론은 가짜뉴스를 퍼뜨릴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면, 언론이 가지는 정보 전달의 가치를 잃게 되고 사람들의 불신이 증가하게 된다.
- 또한, 가짜뉴스를 통해 유포된 정보로 특정 개인이 피해를 보거나 사회 전체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.

반대 논거

주장: 가짜뉴스를 정부에서 규제해서는 안 된다.

1. 가짜뉴스를 비롯한 언론의 활동을 억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.

-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명시된 언론,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.
- 헌법재판소에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이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.
- 또한, 대중의 알 권리와 대중의 시사적 심리를 고려하는 언론의 특성 상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경우 활동이 심하게 억압될 수 있다.

2. 가짜뉴스의 처벌로 인해 표현의 위축이 발생할 수 있다.

-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경우, 사람들은 합법적인 표현 역시 자유롭게 할 수 없게 된다.
-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이 진위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, 가짜뉴스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'위축 효과'가 나타나게 되고, 합리적인 비판과 보도 역시 사라질 수 있다.

[주제 2] 주제 관련 자료

1. 뜨거운 감자 '언론중재법'...가짜뉴스방지법 vs 언론재갈법 [지식용어]

출처: <https://www.sisun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147258>

2. 53.3% "가짜뉴스는 국기문란"

출처: <https://www.viewsnnews.com/article?q=214152>

3. 가짜뉴스 법적 처벌, 어떻게 생각해?

출처: <https://newneek.co/post/wiDHyU/>